

제28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회의 2021. 9. 8.(목)

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
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제4조)
- 나.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다.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기획예산과
- 라. 입법예고 : 2021. 8. 27. ~ 9. 2.(7일간) / 의견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의2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의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(원병일 의원 대표발의)에 따른 제7조(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)에 필요한 성과금 지급 근거 기준 마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연평균 1억원 미만
 - 「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」으로 운영되는 예산성과금 포상금 예산액은 2021년 현재 50,000천원임
- 소요예산 : 50,000천원

4. 작성자

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강 호 진

☑ 「지방재정법」**제48조(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,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, 재정지원을 받는 자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(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「국가재정법」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54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,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)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.